

개방의 문턱에서 우리 서로 이해와 협력을 ...



신 범 식
본협회 상근부회장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경제환경은 UR 협상 타결과 WTO의 등장으로 개방화·세계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하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변환하고 있다.

종전에 각국은 자국의 기업과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어왔으나, 이제는 보호정책을 방어막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즉, 나의 문을 닫아걸고는 더 이상 남의 문을 두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제도나 무역블록에 의한 보호막에는 더 이상 의존할 수 없으며 오직 경쟁력 제고만이 생존전략이며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 경쟁력이란 용어의 적용대상이 기업단위에서 국가단위로 확대되어 각 나라마다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개선에 골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제도 개선과 산업구조개편을 통해 그 해결책을 얻으려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만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편이기에 선진국에서는 자원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적 시장환경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가에 골몰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도 기회가 보이면 체면이나 이미지에 관계없이 즉각 협력과 반목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말이 요즘의 그러한 세태를 대변한다.

자유무역질서 유지를 보장하는, 다자간 협정을 집행력 있는 “경제헌장”으로 하고 있는 WTO체제는 강자에게 더 힘을 몰아 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UR협상타결과 WTO출범 이후 공정경쟁률과 힘의 논리를 앞세운 선진국들의 시장공략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신부문이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개방 요구폭이 매우 커서 경쟁력이 약한 개도국 산업에 최대 시련을 안겨주게 돼 있다.

반면 선진국과 반대의 편에 서있는 나라들에게도 WTO출범이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는 곳마다 선진국의 ‘힘’과 맞서야 한다고 볼 때 ‘열등’의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떠한가. 아무래도 힘이 달리는 마이너리그 체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책적으로 보호되어 온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해야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정보통신분야야말로 인프라스트럭처로서 국가 경쟁력 제고의 첩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통신산업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어느 산업보다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자국의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정책적 산업육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WTO 협상을 통해 통신망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일의 선두다툼으로부터 국제전화, 무선통신 등 각종의 통신서비스 참여에까지 한치도 양보하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개방을 강요하고 있다.

이미 WTO 기본통신협상에서 선진국들은 시내·외와 국제를 망라한 유선전화, 이동통신과 무선통신 그리고 PCS를 포함한 무선통신, 위성통신 등 모든 기본통신서비스 및 통신설비를 협상대상으로 요구, 협상태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선진국들에게 한국의 통신서비스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고 아직은 한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이 국제적으로는 그리 강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 이들에게 한국시장은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다.

통신서비스분야 뿐만 아니라 통신망장비, 단말기,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의 시장도 외국과 견주어 역부족이긴 마찬가지이며, 고부가 가치를 지닌 이 분야도 국제경쟁력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다.

때문에 WTO 체제하의 시장개방은 우리입장에서 볼 때 기대보다는 시름을 더 가져다주는 일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개방예정시간은 다가오고 상황이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통신시장 개방의 파급효과나 영향을 인식하는 정도가 낮고, 통신시장개방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일반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만이 대응책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는 그간 나름대로 국내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한 스케줄을 갖고 왔다. 지난 90년 최초로 미국이 시장개방을 정식 요구해온 이후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 점진적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의 단계를 밟아왔다. 국제전화와 이동통신 복수사업자 지정 등이 그 대표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UR협상타결 이후 WTO의 다자간협상 테이블에 나가게 되면서 이제는 한꺼번에 기본통신 서비스의 전면 시장개방 일정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으며, 개방까지의 시간도 별로 주어지지 않는다.

WTO내 기본통신협상그룹은 내년 4월말까지 협상을 끝내는 것으로 일정을 못박아 놓고 있다. 이때까지 개방의 폭과 시기 등이 결정지워진다. 관련 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지나 7월 “통신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수립, 발표한 것도 개방에 대비한 일련의 조치 가운데 하나이다.

이 안에는 기본통신사업 경쟁체제를 조기에 구축을 한다는 대전제 아래 전면적인 국내경쟁체제를 구축한 다음 외부세력에 대응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우선 올해안에 현행법 체제하에 가능한 국내경쟁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시내 및 시외전화와 저궤도 위성통신사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통신사업에 신규사업자의 참여를 허가한다.

그리고 오는 96년에는 시내전화를 제외한 모든 통신사업의 허가신청을 개방하여 전면적인 국내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이어서 내년의 WTO협상 결과에 따라 오는 98년부터는 국내외 경쟁체제를 갖추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한국통신을 주도적 사업자로서 자리하도록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며 나아가 세계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의 이러한 조치는 80년대 후반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통신사업 경쟁도구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기본 방향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8월 열렸으며, 올해 계획실행을 위한 PCS 등의 사업자신청 접수가 곧 뒤따를 예정이다.

이번 경쟁체제도입조치로 국내통신사업자 체질이 강화될 것이며, 또한 서비스개선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크다.

다만 신규사업자 허가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제 전면개방 일정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자칫 국내신규 사업자와 외국에서 상륙할 서비스가 시간적으로 별차이 없이 시작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면 좀더 일찍 새로운 국내 사업자 참여를 허락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올지도 모른다.

소비자(사용자)들은 우리의 것이라는 점 때문에 관심의 우위를 두지 않는다. 값싸고 품질 좋으면 선택한다. 이런 가치관이 통신서비스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사업자도 경쟁력이 없으면 국내시장에서도 도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국내사업자끼리의 경쟁은 국가전체로 보면 ‘제로섬 게임’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개방화 시대엔 다르다.

WTO 체제 출범이 앞으로의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을 예측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했다. 일대전환기로 접어든 지금 통신시장개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국내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시장을 방어하는 한편 세계 정보통신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국민적 이해와 역량을 모으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